

# ‘숨은 표 5~8%’ 놓고 박·文·李 ‘아전인수’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심〉

## 새정치 당권 1·2위 후보 혼전편 당락 변수

### 캠프마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 기대 속 촉각 곤두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당권 구도가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숨은 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 답변하지 않는 부동층 가운데 지지 후보가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표심을 숨은 표로 정의하며, 선거에 반영되는 숨은 표 효과를 대략 5~8%로 추정하고 있다. 1위와 2위 후보 간에 8% 포인트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해도 숨은 표로 인해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숨은 표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새정치연합 대표 경선에서의 숨은 표는 일반 선거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반 시민보다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대하기 보다는 부동층으로 이탈,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 캠프에서는 경쟁적으로 숨은 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숨은 표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숨은 표가 일반적 대선론에 저항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숨은 표는 냉철하고 확고한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친노 계파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과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공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을 의식, 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숨은 표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측에서는 경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당원을 중심으로 박 후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숨은 표는 승리를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숨은 표는 조직보다는 민심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박 후보에 비

해 당심의 요구인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숨은 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숨은 표는 냉철하고 확고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이미지가 강한 박지원 후보에 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문 후보가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숨은 표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후보 측의 기대는 더 크다. 숨은 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이 후보 지지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당내 세력이 가장 약한 이 후보 지지층이 숨은 표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숨은 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숨은 표가 추격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막판 대역전극의 극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급해진 당정협의회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이야기를 나누는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무성 대표 전복서 ‘민생행보’

### 1박 2일 일정...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도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새해 들어 지난 19일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서다.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연말 계파 갈등이 불거진 대이더 연초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 논란까지 벌어지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민생 투어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박경철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시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전북 지역 언론인들과 만찬을 갖고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할 가운데 각종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송 지사로부터 ‘명예 도민증’도 전달받는다. 이어 전주 효성 탄소섬유 공장을 방문해 전북 지역 탄소산업 현황을 살펴본 뒤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만금 현장도 찾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종교계 인사인 장승철 원불교 중법사도 예방한다.

김 대표는 작년 7·30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이후로 무주 태권도원 개인 행사, 전북희망포럼 송년 행사 참석차 전북지역을 몇 차례 찾기는 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의장 덕분 ‘호남출신’ 기편다

### 국회사무처 고위직 전문성·능력위주 인사

### 소외됐던 수석전문위원 등에 대거 발탁

요즘 국회사무처 호남출신 공무원들은 기를 펴고 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들어오면서 공정한 인사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18대 및 19대 상반기 때까지는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소외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18개 상임위·특위에 한 명씩 배치되는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단 2명에 그쳤다.

하지만 정의화 19대 하반기 국회의장이 단행한 지난 1월 인사에서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탁됐다. 이 인사는 정의가 실시한 첫 대규모 인사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전남대 출신인 정재홍(고창) 전문위원이, 이사관에 김일권(국제국장, 목포), 남원희(감사원 과장, 담양), 박찬수(특위 전문위원, 해남), 이상규(건설기술연구원 과장, 보성) 부이사관 등 4명이, 국장급 직위 승진에 김학배(정보위 전문위원, 고흥), 오창석(의회외교정책 심의관, 무안), 장종원(경호기획관, 신안) 부이사관 등 3명이, 부이사관에 이상성(함평)·이옥순(목포)·박창희(해남) 과장 등 3명이 각각 승진됐다.

이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을 정재홍, 문강주(화순·농해수위), 김병선(목포·산업위), 김수홍(익산·국도위), 김요한(전북·특별위) 등 5명의 호남인사가 맡게 됐으며, 국회 내 요직으로 평가받는 의사국장(장대식·익산)과 국제국장(김일권·목포) 역할도 호남출신이 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의 의원은 인사 당시 “이번 인사는 인성, 적극성,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표 떨어진다” 與지도부 ‘연말정산 소급적용’ 급선회

### “홍보 부족 탓” 청와대와 달리

### 심각한 민심 이반 우려 판단

### 박대통령 재가까지 받아낸듯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자 전격적으로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다.

단순 홍보 부족을 탓한 청와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자칫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세금폭탄’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오히려 정부의 홍

보 부족을 탓하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원내 지도부가 일제히 과표구간 설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나서며, 정부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한 추가대책 마련으로 분위기가 돌아섰다. 당시 회의에서 몇몇 의원은 아예 “선거에 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무성 대표와 이원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불러 같은 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소급적용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에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모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

려진다. 실제 비슷한 시각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많이 떴고 많이 받는다. 조금 떴고 조금 받는다의 문제”라며 “결국 서민중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주 의장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 양쪽 핵심 포스트와 물밑 조율을 진두지휘했고, 소급적용 문제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승인까지 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소급 적용에 대해 사실상 승인했으니 당정협의회가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했다. 윤호중 간사를 포함한 야당 기재위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 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범인세 감세 철폐,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산·서민층 직장인의 세액공제 인상,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5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진흥지구”라 한다)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70억원**
  - (정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 : 20억원
  - (공단)대체산업융자준비금 : 150억원
  -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접수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업 종 : 제조업,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산업
    - 진흥지구 안에서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
  - ※ 1. 은행연이자율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 2. 창업 및 이전기업은 사업개시 및 이전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 지원내용**

용자구분	지 원 내 용
사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비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비 포함)
- 지원조건**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용	대출금리
사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운전자금	2년/3년	7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15.1분기 현재 1.75%)

  - ※ 1. 융자한도액(시설비)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 2. 운전자금은 '14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미상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3.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http://www.mirec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해당 도 1부,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신청기간 : 2015. 1. 15. ~ 2015. 2. 24(40일)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업종은(별첨)참고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성 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09호, '14.10.29)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정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

###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열람 · 공고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877-1번지 일원에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2 **광 양 시 장**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명 :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나. 위 치 :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877-1번지 외 4필지
  - 다. 면 적 : 20,882㎡
  - 라. 사업기간 : 2012 ~ 2015년
  - 마. 시 행 자 : 광양시장,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 농업진흥지역 편입현황**

구 분	합 계	농 지			비 농 지
		소 계	답	기타농지	
합 계	20,882	10,153			10,729
농업진흥지역	10,668	10,153			515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10,668	10,153			515
농업진흥지역밖	10,214				10,214
- 열람기간 : 2015. 1. 22. ~ 2015. 2. 5(15일간)**
- 열람장소 : 광양시청 건설방재과**
- 의견제출 :**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방재과(☎061-797-1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지적	편입			
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877-1	전	10,132	6,566	이연순 외 20	순천시 왕지동 844 롯데캐슬아파트 105-1504	
2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877-9	전	3,587	3,587	이연순 외 20	순천시 왕지동 844 롯데캐슬아파트 105-1504	
3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877-8	도	2,182	506	국(건설부)	-	
4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산13-4	도	4,747	9	광양시	-	